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선거전 집화

등록 첫날 152명 예비후보 등록... 시장 27명·도의원 31명·시의원 94명... 민주당 '웃음꽃' vs 야당 '후보 기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 또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당 등에 따르면 단체장(시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일 15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먼저 시장 선거의 경우 전주 1명, 군산 8명, 익산 4명, 정읍 7명, 남원 2명, 김제 5명 등 총 2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도의원 선거는 31명, 시의원 선거는 94명이

등록했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운동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이다.

각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대형 현수막 등을 내걸어 책임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27

명의 후보 중 1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또 지난달 28일 마감 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에도 총 200명(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이 접수하는 등 이른바 후보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각 시군마다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면서도 인물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역시 뚜렷한 후보군이 없어 이른바 '후보 기근'을 겪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후보들이 나뉘는 있다"며 "기존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 준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이렇다 할 후보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차 자격심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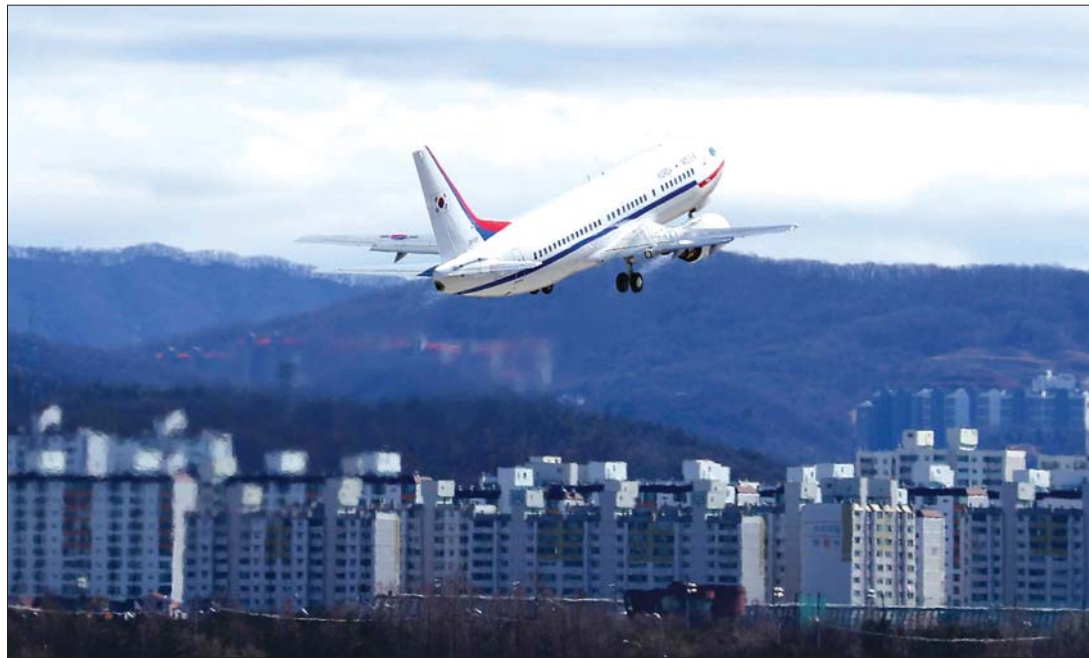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에 대한 제1차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4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를 열고 전체 201명의 신청자 가운데 △직적 198명 △부직적 1명 △정밀심사(보류) 2명 등을 의결했다.

앞서 전북도당은 2월 28일부터 28일까지 광역의원, 단체장,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고를 받은 결과 광역의원 44명, 단체장 42명, 기초의원 115명 등 모두 201명이 신청을 마친 바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당헌 당규의 규정에 따라 파렴치 및 민생범죄(사기, 공갈, 폭행)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일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이륙하는 대북 특사단 특별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이 탑승한 특별기가 5일 서울공항공에서 이륙하고 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의당, 의총서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노회찬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 최대한 폭넓은 당원의 의견 수렴”

정의당은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건을 논의한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장병완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민주평화당 공식 제안을 접

수했다”며 “정의당은 내일(6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안의 성격상 길게 논의를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그간 원내활동과 관련해 정책입법 방향이 같다면, 차이가 적다면 당을 넘어선 연대를 실현해왔다”면서도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형식과 틀이 우리

가 해온 것과 다른 새로운 제안이어서 그에 걸맞은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독일 사회민주당이 연정 결정과정에서 정당원 투표를 했다. 사안도 다르고 정치 문화도 다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최대한 폭넓은 당원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 등 의결기구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의총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총 직후 바로 입장을 밝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가 끝나고 바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최고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원내 총의 (수렴을) 마쳤다”며 “국회의원·핵심당직자 워크숍을 하면서 원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만장일치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거치고 내부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면서도 “오래 끌 내용은 아니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안호영 의원, 장수 의정보고대회 천 명 운집 성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의 장수군 의정보고대회가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 양성빈 전북도의원, 김춘진 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송하진 도지사의 부인 오경진 여사 등 내외 귀빈과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 의원의 지난해 성과와 2018년 의정계획이 발표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북과 장수군에 사회적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5개 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며 “장수군민께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정권교체를 해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상영한 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장수군의 국가예산 확보사항과 해소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 입법을 촉구하는 장수군민 8천여 명이 서명한 용지를 안 의원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순서도 진행됐다.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안호영 국회의원은 가장 일 잘하고 든직한 장수군의 효자 국회의원이다”고 격려했다.

양성빈 도의회 의원도 “열정과 땀으로 일군 의정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올해 더 빛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축하했다.

의정보고대회를 마친 안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민원이 제기된 장수군 계남면 계남우회도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뒤 함께 대책을 강구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 조직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조직구성이 완료됐다. 이수혁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46일만이다.

지난 3일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수혁 위원장을 비롯한 정읍·고창의 군수와 도의원, 시의원, 고문단과 지역대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지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조직구성이 완료됐으며 중앙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혁 위원장은 금품선거와 흑색비방, 공작정치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다짐했다.

참석자 모두는 당원선서를 통해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한편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공명·공정선거’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조직 구성에서도 이를 철저히 반영했다.

지역위원회는 기존 각 읍면동당원협의회장의 경우 현역 시군의원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이와 같은 구성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자 오랫동안 협의회장 경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인물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기울림이 없다고 인정되는 인물 등 몇몇만을 유망한 채 모두 새 인물로 교체했다.

또한 지역대의원의 수가 많을 경우 권한행사의 규모도 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합종연횡’이 우려됨에 따라 당헌·당규가 정한 당연직 위주 최소 인원만으로 지역대의원을 꾸렸다.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얘기를 수단으로 본인에게 편견을 주지 말아 달라. 모든 후보에게 철저히 등거리를 유지해야만 선거 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며 “공직 임무가 있는 본인은 사욕을 거부하고 추구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